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94

제안연월일 : 2014. 10. 14.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주문

○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도교육청 자체재정으로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임. 더욱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법정전입금 세입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재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정부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음.

○ 특히,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세입의 17.5%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함.

3. 이송처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문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증대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격차에서 비롯된 경제적 양극화에 기인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에 있어서의 복지는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우선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상태에서 추가로 이러한 국책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도 교육청은 기본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도 누리과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2,3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인천시교육청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58.7%, 전체 복지예산의 약 80.7%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다. 즉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결손이 지방교육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인천시로부터의 전입금이 세입의 약 1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인천시의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